



## 정책 동향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300억원 중 지난 3월 1344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486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5월 20일 중소기업청은 충청북도를 포함한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개도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48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들어 2차로 지원된 이번 자금은 지난 3월 9개 시·도에 지원한 1344억원과 합해 총 1830억원이 시·도에 지원돼 하반기 1470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지원업종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과 지역사정을 감안해 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한 업종이며,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조달에 지원된다.

시설투자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5.9%로 10억원까지 가능하며, 3년거치 8년이내이며 또 운전자금은 연 5.9%에 최고 3억원까지 지원되며, 1년거치 3년안에 상환시키면 된다.

중기청은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신청은 기업 소재지 관할해당 시·도 기업지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 중기청, 기보보증 규모 올 대폭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관련기관장 및 금융기관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기술신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727억원에서 올해 1천억원으로 확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창업 준비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 기술신보의 기술, 사업성 평가만 거치면

자금 대출기관에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업체당 연간 최고 1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술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를 오는 2005년도까지 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지원 대상 자금도 현행 창업자금에서 기술력 평가를 요하는 정책자금 및 시중 금융기관의 기술개발관련자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평가 기법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신용평가연구회'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또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1500명의 중소기업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리스크 자가진단시스템을 기업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 홈페이지에 설치하기로 했다.

## 지자체 선금지급 제도개선

정부가 내수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키 위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해 공사금액의 7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케 됐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선금지급 최고 상한율을 70%로 종래 기준을 유지하되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하한율로부터 최고 70%까지 자치단체가 자금수급상황과 계약대상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물품·용역계약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기존 선금에 추가로 10%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선금청구 시 의무사항이던 월말정산제와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전면 폐지하여 선금전액사용 시에만 최종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특히 계약대상업체는 선금수령 시 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토록 하여 원도급업체의 선금독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김동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금지급제도 개선으로 올해 34조원에 달하는 지방조달금액 중 2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발주기관이 자금형편과 계약대상업체의 신용도 등에 따라 선금지급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고, 지역업체들은 선금신청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신속하게 선금을 지급 받게돼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KOTRA, 중동시장 공략 본격화

KOTRA는 14일 쿠웨이트에서 오영교 사장 주재로 '이라크 전후복구 중동지역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한국 기업들의 복구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KOTRA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중동지역의 경제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역관별로 고성장 예상지역에 대한 인력보강 및 예산증액 등 사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사 직원 1명이 근무했던 바그다드 무역관은 오는 8월부터 3명으로 증원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무역관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미 국방부 산하 재건인도처(ORHA)나 국제개발처(USAID)의 주도로 긴급물자 구매 및 필수용역 발주에 한해 진행중인 이라크 복구사업은 임시정부 구성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시정부 구성 이후 공공발주는 발전·배전, 주택, 유전개발, 상·하수도, 공항, 정유, 통신, 기계 부문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중소형 발전기, 건설장비, 자동차, 건축자재, 전선, 무선통신 단말기, 식물, 가전 및 부품, 중소형 기계류를 유망품목으로 전망했다.

KOTRA는 이에 따라 이라크시장 진출전략을 △1단계 우회진출(7월말까지) △2단계 직접 진출(8~9월) △3단계 본격 공략(10월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구사하기로 확정했다.

1단계에서는 오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중동지역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한 시장 개척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바그다드 무역관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근무 인프라를 갖춰 국내 업체들의 현지 지사개설, 바이어 발굴 업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는 오는 10월중 바그다드 한국상품전 개최와 내년 5월중 쿠웨이트 한국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이라크 및 중동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KOTRA는 올해 대 중동 수출규모가 작년보다 12.1% 늘어난 85억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영교 KOTRA사장은 "유가인상에 사스(SARS) 여파까지 겹쳐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전후 중동시장은 이제 대체시장이나 틈새시장이 아니라 수출의 사활이 걸린 곳이 됐다"며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해 현장위주의 시장개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KS관련 정보제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개설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standard.go.kr](http://www.standard.go.kr))가 오픈했다. 산업

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 이 사이트는 KS는 물론이고 ISO, IEC등에 대한 규격검색이 가능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 현황, 통계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국내 표준화사업이나 ISO,IEC위원회의 활동 등 국제표준화사업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각국의 인증제도를 검색해 해외수출 때 필요한 각종 인증마크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WTO/TBT 협정문과 협정해설서, 기타 무역상 기술장벽과 관련된 자료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전략과제에 300억 투입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계획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청은 1일 '200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전략과제'를 선정해 지난해에 비해 70% 증가한 총 3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략과제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기술을 발굴,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왔다.

중기청은 ▲수출유망품목과제(182개) ▲우수특허과제(237개) ▲신기술아이디어 타당성평가과제(102개) ▲수요조사과제(321개) 등으로 과제를 다양화해 350개 업체를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앞으로 수출통계를 비롯한 여러 자료와 특허로드맵(Patent Map) 등을 이용해 중·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수출비중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고과제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공장등록증을 갖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과제에 해당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이번 전략과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금번 접수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였다.

한편 중기청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미시행업체에 과태료 부과

정부는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를 철저히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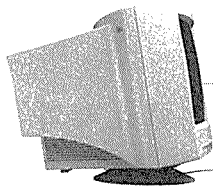
산업자원부는 최근 공사계획신고 대상 전기설비에 대해 '공사계획 신고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 및 변경공사는 공사 이전에 계획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사용전 검사 이전에 신고하는 업체가 많아 올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벌인 후 내년부터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사업체에선 안전관리자 감리원 선임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자 관행적으로 대부분 사용전 검사 이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업체는 앞으로 공사계획신고 시 감리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원 배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사용전 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 5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계획신고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됐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적용시점이 공사계획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 공사계획 신고를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진흥회 Homepage 이동안내

<http://www.koema.or.kr>